

KINU 정책제안서 12-11

#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에 대한 시사점

## 정책제안서(12-11)

인쇄 2012년 11월 발행 2012년 11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기획·디자인·인쇄처 두일디자인(2285-0936)

등록 제2-02361호(97.4.23)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900-4300(대표) 901-2525(직통)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통일연구원, 2012

비매품

# 정책제안서

##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에 대한 시사점

연구책임자: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황병덕(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강택(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환(한국국제교류재단 공공외교사업부 교수)

송영훈(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장용석(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1. 배경 및 문제점 .....	1
2. 주요 연구 결과 .....	3
가. 정치적 성격과 변동 .....	3
나. 정치경제학적 성격과 변동 .....	7
다. 혁명이론과 독재정권 .....	10
3. 정책 제언 .....	12
가. 북한 정권 분석에의 유용성 .....	12
나.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단계 예측에의 유용성 .....	14
다. 정치체제와 경제실적 상관관계 분석에의 유용성 .....	17
라. 지대의 성격과 사용의 분석에서 유용성 .....	19
마. 경제개혁과 반개혁의 악순환에 대한 설명에서 유용성 .....	20
바. 북한 정치변동의 이해에서 유용성 .....	21
4. 기대효과 .....	24
참고자료 .....	25



## 1. 배경 및 문제점

한국의 북한연구는 장족의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여러 변화로 인해 새로운 연구주제가 등장하고 있다. 관련 주제를 보면 내부 변화상, 주변 환경과 정책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정책 주제들, 대내외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북한 내부 변화의 동태성, 북한 미래 변화 양상이 조건 변화에 따라 다양해질 가능성 등이다.

북한정치연구도 새로운 주제의 등장에 직면하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정치연구가 새로운 도전을 성과적으로 응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제에 대한 정치학의 여러 개념적, 이론적 성과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 이해하면서 북한정치연구에 적용해보려는 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비교정치학계와 정치경제학계에서 대략 2000년대 초반부터 활성화되었던 독재연구의 다양한 접근과 이론적, 개념적 성과들을 북한정치연구에 적용해보기 위한 실험적 시도이다. 여기에다가 2000년대 이래 연구 조류에서 각광을 받지 못했더라도 독재정권의 정치 변동에 유효한 기타 이론과 개념이 함께 연구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학계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아직 걸음마 단계인 것을 감안하여 북한정치연구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이전에 예비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재정권의 성격과 변동에 관한 여러 이론을 개설적이고 계몽적으로 소개하는데 중점을 둔다.

2000년대 이후 활성화되었던 독재정권에 관한 연구의 주축은 ① 제도주의적 접근, ② 정치경제학적 접근, ③ 혁명이론적 접근이다. 제도주의적 접근은 독재정권의 제도적 다양성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제도적 특성에서의 차이에 따라 정권이 유지되는 방식 및 정치변동의 특성 역시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정치경제학적 설명은 독재의 정치구조와 경제적 자원배분이 어떻게 상관하는가, 이것이 해당 국가의 경제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혁명이론적 접근은 어떤 독재체제가 어떠한 이유로 붕괴하는가에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독재정권 연구에 관한 세 분류에 따라 전개한다. 제1장은 독재정권 연구의 전개와 주요 경향을 서술하고, 제도주의 접근에 입각하여 독재정권 제도의 다양성 그리고 특히 개인독재정권의 정치변화에 대해 서술한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것은 분류하는 기준들 예를 들어 ‘어떻게 통치하냐’ 또는 ‘누가 통치하냐’에 따라 독재정권이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제도적 특징은 어떠한지 그에

따라 정권 유지 및 정치 변동 방식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서술한다. 독재 정권에 관한 몇 가지 분류 방식 중에서도 개인독재정권, 일당독재정권, 군사독재정권의 세 분류를 여기서는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이 세 분류는 가장 흔하게 채택되는 분류일 뿐 아니라, 개인독재라는 개념이 북한정권의 특성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다른 분류법에 대해 우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의 ‘회색시대’에 존재하는 ‘혼합정권’ 개념에 대해서도 서술한다. 실제로 ‘민주화의 제3의 물결(1974~1995)’ 과정에서 붕괴했다가 새로 탄생한 많은 정권은 혼합정권으로 구별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북한 정권이 정치변동을 겪었을 때 그 결과로 성립하는 정권을 상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북한과 관련한 중요성에 비추어 개인독재정권의 정치변동에 관한 이론도 소개한다.

제II장이 보다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 즉 권력 정치를 중심으로 서술한다면, 제III장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 또는 정치경제적 입장에서 정치를 분석하는 접근에 대해 서술한다. 제III장의 주제는 독재의 경제모델 그리고 독재정권이 지탱하는 경제적 기반이다. 여기서는 네 가지 하위주제를 다룬다. 첫째, 독재적 정치구조와 경제적 자원배분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이다. 정치구조에 따라 자원배분 또는 경제모델이 달라지고 또한 그에 따라 경제실적이 달라진다는 명제와 관련된 여러 이론을 설명한다. 이러한 연구는 현재 북한 통치연합의 성격과 특권적 자원배분, 체제의 내구력을 설명하는 데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다. 둘째, 대외원조가 독재정권의 존속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 셋째, 통치연합이 외래시대 수입에 주로 의존하여 지탱될 때, 그러한 정치체제의 성격 및 그것이 정치변동에 주는 영향에 대해 서술한다. 둘째와 셋째 주제에 대해서 따로 절을 설정한 이유는 북한이 1990년대 중반 및 2000년대 중반 이래 원조 의존 및 자원 수출 의존 국가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 정권의 지탱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북한 정치의 성격, 내구성과 앞으로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넷째 주제는 독재국가의 발전과 저발전에 관한 것이다. 이 주제는 북한의 개혁개방 여부 그리고 그 성패의 여부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제IV장은 혁명에 관한 이론이다. 이 부분은 2000년대 이후 흥성한 독재정권 관련 연구에서 사실 가장 취약하게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 주제에 관해서는 2000년대 이후의 새로운 이론과 개념의 발전에 대해 소개하는 것과 아울러 이 분야에서 전통적 고전적 접근에 대해서도 서술한다.



제V장은 이상에서 소개된 여러 이론들이 북한 정치의 성격과 정치변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정책 제안을 하는데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서술한다.

## 2. 주요 연구결과

### 가. 정치적 성격과 변동

#### (1) 독재연구의 전개와 주요 경향

독재정권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시기에 따라 흥망성쇠를 겪었다. 역사적으로 독재정권이 흥성하던 시기에는 독재정권 연구 역시 흥성했다. 반대로 지구상에서 독재정권이 전체적으로 약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에는 이에 대한 연구 역시 쇠퇴했다. 최근 시기 독재정권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 다시 활성화되었다. 이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독재정권이라 분류할 수 있는 정치체제가 다시 흥성했던 경향과 일치한다.

2000년대 들어 독재연구가 다시 활성화된 것은 이른바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의 쇠퇴와 관련이 있다.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을 배경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흥성했던 정치변동 또는 이행연구는 민주화 연구를 주축으로 했다. 그런데 민주화의 제3의 물결에 휩쓸렸던 많은 나라들에서 ‘이행’의 결과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련의 국가들은 민주주의 공고화로 움직였지만, 다른 곳에서는 애초에 ‘이행’의 한 경과 단계로 이해되었던 비자유주의적 상황이 지속되었다. 따라서 ‘독재로부터의 이행’이라는 것을 ‘민주주의로의 이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러한 현실의 변화와 학문적 각성을 바탕으로 2000년대 초부터 권위주의에 대한 연구가 강화되었다. 새로이 등장한 권위주의 연구의 핵심은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의 결과로 많은 나라에서 등장했던 새로운 독재정권이 놀라우리만치 내구성과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었다.

#### (2) 독재정권의 분류

독재라는 개념은 로마시대에 탄생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독재라는 이분법적 구별이 탄생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였다. 독재는 모든 선(善)을 체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민주주의가 아닌 모든 나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착했다.<sup>1)</sup> 오늘 날에

도 많은 연구가들이 이러한 전통을 따르고 있다. Gandhi는 통치자가 경쟁적 선거 이외의 방법으로 권력을 획득한 정권을 독재라고 정의한다.<sup>2)</sup> 그러나 한편에서 1930년대에 전체주의 유형이 등장하면서, 독재를 전체주의와 권위주의로 나누어 보는 시각이 발생했다. 1960년대 이래 정권 분류에서 가장 영향력을 누렸던 분류는 민주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의 세 가지 유형 분류이다. 그러나 일련의 연구가는 민주주의 대 독재(또는 비민주정권)의 이분법적 도식을 고수했다. 이 이분법에 따르면 독재유형에는 민주주의가 아닌 모든 잔여 정권들이 포함된다.<sup>3)</sup> 다시 말해 독재는 왕정으로부터 전체주의를 망라하는 여러 전통적 지배형태를 포괄한다.

정권 분류에서 1960년대 이래 오늘날까지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분류는 린즈(Juan J. Linz)의 세 분류이다.<sup>4)</sup> 그는 정권유형을 전체주의, 권위주의, 민주주의로 분류했다.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분류에서 ‘권위주의’ 유형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에 속하지 않는 매우 다양한 잔여 정권을 망라하여 표현하는 범주였다.

그런데 전체주의로 분류할 수 있는 정권 유형이 현실에서 점점 드물어져 가면서 이와 같은 세 분류는 현실에서 이론적 유용성이 감소했다. 여기에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독재정권에 대한 연구가 흥성해감에 따라 현실적으로 정권 분류는 민주주의와 독재(또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또는 민주주의와 비민주정권)라는 두 분류가 사실상 정착하는 경향이 굳어져갔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을 거치면서 변모되어 탄생한 여러 정권의 유형 분석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각각의 유형은 더욱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1) Jennifer Gandhi, *Political Institutions Under Dictatorship*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p. 5~7.

2) *Ibid.*, p. 7.

3) Wolfgang Merkel, *Systemtransformation: Eine Einführung in die Theorie und Empirie der Transformationsforschung. 2., überarbeitete und erweiterte Auflage*; Natasha Ezrow and Erica Frantz, *Dictators and Dictatorships: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s and their Leaders* (New York: The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2011).

4) Juan J. Linz, “An Authoritarian Regime: Spain,” E. Allardt and S. Rokkan (eds), *Mass Politics* (first published 1964) (New York: Free Press, 1970); F. I. Greenstein and N. W. Polsby (eds.),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Macropolitical Theory: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3* (Reading, M.A.: Addison-Wesley, 1975). 그는 나중에 술탄주의를 또 하나의 정치체제로 첨가했다. 이렇게 보면 린즈는 현실적으로 정권유형을 4개로 분류한 것이 된다. H. E. Chehabi and Juan J. Linz (eds.), *Sultanistic Regim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8).

2000년대 들어 재등장한 독재정권 연구에서 주류 경향은 독재정권의 제도적 다양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이었다. 이러한 제도주의적 경향은 이미 전체주의론이나 권위주의론에 등장해 있었다. 새로운 제도주의적 연구 경향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를 구분하는 고전적 유형 분류를 넘어서 독재정권의 일련의 유형분류를 발전시켰다. 여기서 대표적인 학자가 앞서 지적했듯이 게디스(Barbara Geddes)와 간디(Jennifer Gandhi) 그리고 마가로니(Beatriz Magaloni)이다. 이 중에서도 게디스의 군사독재, 일당독재, 개인독재의 세 분류가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누가 정치적 직위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가에 따라 독재를 분류했다.

“군사 독재에서 장교 그룹이 누가 통치하고 누가 정책에 일정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결정한다. 일당 독재정권에서는, 일당이 정치 직위에 대한 접근을 지배하며 정책을 통제하는데, 다른 정당도 존재할 수 있으며, 선거에서 중요하지 않은 행위자로 경쟁할 수 있다. 개인독재정권은 군부독재와 일당독재와 다른데, 개인 지도자의 직책에의 접근과 직책의 과실분배가 개인지도자의 재량에 현저히 달려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sup>5)</sup>

간디와 쉘보르스키(Adam Przeworski)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했다.<sup>6)</sup> 이들은 독재정권을 독재자의 개인별 특성들, 즉 그가 군주인가, 군인인가 아니면 민간인인가에 따라 구별한다. 군주정권은 통치자가 ‘왕’이며, 가족과 친척이 누가 통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권으로 개념되어 있다. 군부 정권은 정부의 실질 수반이 정권을 잡기 전에 제도화된 군대의 구성원이거나 또는 과거에 군인이었거나 하는 정권으로 개념 규정된다. 민간독재는 그 나머지 정권으로, 지도자가 왕이거나 군인이 아닌 정권이다.<sup>7)</sup> 또한 간디와 쉘보르스키는 의회, 선거 등과 같은 독재정권의 구성요소인 명목상 민주제도의 기능에 주목했다. 두 사람은 독재체제에서 정당과 선거는 정책상의 양보를 통해 잠재적 반대파를 선택 포용(coopt)하기 위한 제도, 또는 독재자가 통치엘리트와 거래를 하고 이를 견고하게 하는 제도라고

5) Barbara Geddes, *Paradigms and Sand Castles: Research Design in Comparative Politics*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3), p. 51.

6) Jennifer Gandhi and Adam Przeworski, “Cooperation, Cooptation and Rebellion Under Dictatorship,” *Economics and Politics*, Vol. 18, No. 1(2006); Gandhi and Przeworski, “Authoritarian institutions and the survival of autocrats”; Gandhi and Przeworski, *Political Institutions Under Dictatorship*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7) Gandhi and Przeworski, *Political Institutions Under Dictatorship*, pp. 32~33.

보았다.<sup>8)</sup> 반대파를 억압할지 선택 포용할지 두 선택 중에서 독재자의 결정은 지도자와 반대자의 힘의 상대적 관계, 가용지대(地代)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독재자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면, 독재자는 정책 양보를 제공하여 지대(rent)를 획득하기 위해 타협해야 한다. 독재자의 선택은 또한 폭동 위협에 의해 형성된다. 반대자가 약하면 독재자는 자신의 지대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택하고 정책 양보를 하지 않는다. 반대자가 강하면 독재자는 정책양보, 정당과 입법부의 창조를 통해 선택 포용을 실시한다. 반대자의 힘이 중간정도여서 반대자가 독재자를 무너뜨리기도 어렵고, 독재자가 반대자를 억압하여 손해를 끼치기도 어려우면, 독재자와 반대자 사이에 협력은 없을 것이고 정권은 끊임없는 소요에 의해 특징 지워질 것이다. 독재는 입법부 등의 제도적 틀을 활용하여 잠재적 반대자에게 정책 양보를 제공한다. 간단히 따르면 “정책 타협이 이루어지자면 독재자와 반대파가 참여하는 적절한 제도적 포럼이 필요하다. 이 포럼은 접근을 통제하고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요구를 할 수 있고, 지나치게 공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협을 끌어낼 수 있고, 결과 된 합의가 법령의 형태로 결정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포럼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입법부라는 제도적 틀이 가장 적합하다”<sup>9)</sup>고 한다.

마가로니는 게디스의 세 분류에 입각하지만 이를 수정하여 발전시키고자 한다. 게디스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자면, 독재자가 자신을 권좌에 앉게 만들어준 제도, 즉 정당이나 군대로부터 자립하여 군림하는 경우를 ‘개인독재정권’이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에서 난점은 개인독재 지도자가 권력의 토대가 되는 정당이나 군대로부터 자립했는가 안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독재자가 정당이나 군대로부터 과연 자립했는가의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양한 혼합정권 유형을 설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독재-군부의 혼합, 개인독재-일당독재의 혼합, 군부-일당의 혼합, 지도자-군대-일당의 혼합 등이다. 이렇게 되면 분류가 객관적이기 힘들고, 너무 많은 정권을 혼합정권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0)</sup> 따라서 마가로니는 개인독재라는 범주를 폐기하는 대신 왕정, 일당독재, 지배정당(Dominant party) 독재, 군사독재의 네 가지 분

8) *Ibid.*, pp. 73~101.

9) *Ibid.*, p. 13.

10) Beatriz Magaloni, “Comparative Autocracy,” Paper for delivery at the conference “Research Frontiers in Comparative Politics” (Duke University, April 27, 2007), pp. 32~33.

류로 할 것을 주장한다.<sup>11)</sup> 여기서 일당독재는 입법부 의석이 100% 일당에 장악된 경우, 지배정당 독재는 입법부 의석이 100%가 안 되는 경우이다.

## 나. 정치경제학적 성격과 변동

앞서 독재정권의 제도적 다양성에 따른 유형 분류를 했다. 이와 같은 정권 유형의 정치적 분류와 함께 발전했던 것이 독재정권의 정치경제학적 연구이다. 이러한 모델에서 중점 연구 사항이 몇 가지 존재했으며, 본 연구의 서술도 이와 같은 중점 사항을 중심으로 서술될 것이다.

### (1) 독재의 정치경제학적 모델

독재의 정치경제학적 모델은 정치권력의 성격에 따라 사회 내의 자원 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또한 그것이 정권의 생존, 내부 갈등, 그리고 경제실적과 같은 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모델은 여러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했다. 독재자는 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며, 독재자의 직위가 유지되려면 정권유지에 필요한 핵심 지지자들을 매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독재자에 대한 반대가 사회적으로 미약할 때는 잠재적 반대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원배분 정책을 취할 수 있지만, 만약 강력할 때는 잠재적 반대파와 타협하는 경제정책을 취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독재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얼마나 오래 집권할 수 있는가라는 시간 계산에 따라, 단기적이면 보다 약탈적 행위자가 되고, 장기적이면 전체 사회의 생산을 증대하여 장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털럭(Gordon Tullock)은 합리적 선택이론을 사용하여 최초로 독재모델화를 시도했다. 그는 독재자들이 지지자들에게 독점을 나누어주는 것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독재자는 소득을 올리며, 정치적 지지를 확보한다. 이러한 독점 배분은 경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 결과를 낳으며, 이러한 체제에서는 지대추구가 만연하게 된다.

올슨(Mancur Olson)은 떠돌이 도둑떼와 정착한 도둑떼를 구별했다. 떠돌이 도둑떼는 단기적 시야에서 약탈 대상에 대해 과중한 조세 부과와 재산 몰수를 감행

11) Magaloni, "Comparative Autocracy," p. 34.

한다. 정착한 도둑떼는 마을의 생산성을 높여서 장기 총소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관리한다.

윈트로브(Ronald Wintrobe)'는 독재자가 억압과 충성을 어떻게 배합하는가에 따라 독재의 네 가지 유형을 구분했다. 전체주의에서는 억압과 충성이 공히 높다. 폭정(tyranny)은 억압이 높은 체제이다. 평범한 독재(tinpot)에서는 억압도 충성도 낮다. 금권정치(timocracy)는 선량한 독재로 억압은 낮고 충성은 높다

메스키타(Bruce Bueno de Mesquita)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학자들은 정권의 유형과 자원배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일반이론을 발전시켰다.<sup>12)</sup> 정권의 유형은 '승자연합'의 크기로부터 도출되는데, 승자연합은 보다 규모가 큰 '선출인단'으로부터 도출된다. 승자연합은 지도자가 권력을 유지하자면 반드시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집단으로 선출인단의 일부이다. 승자연합의 규모가 비교적 큰 경우 이들에게 사적재를 분배하여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에 비해 승자연합의 규모가 작으면 통치자는 이들에게 사적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자신의 직위를 유지해갈 수 있다.

약탈 국가론은 여러 이론가에 의해 주목받고 이론화되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하여 약탈국가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에게 고도로 집중된 정치권력이 소수의 '약탈 연합(predatory coalition)'을 통해서 조정되고 유지된다. 이때 전통, 관례 또는 법적인 장치나 이념적인 정당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둘째, 약탈 연합이 집중된 권력을 기반으로 경제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분배하는데 있어서 재량권을 갖고 있다. 셋째, 자원을 가시적인 발전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넷째,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공공재의 체계적인 공급 등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구한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섯째, 권력을 쟁취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다수에게) 무자비한 압력을 가한다. 여섯째, 권력의 옹호자들과 지지자들에게 위협과 보상을 함께 주어 충성을 다짐하게끔 한다. 일곱째, 반대세력이나 경쟁자를 처벌(단죄)하기 위해 상당한 잔인한 행위와 추방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여덟째, 법의 지배나 시스템이 무너져있다. 아홉째, 경제수준의 저하가 계속된다.

12) Bueno de Mesquita, Bruce, Alastair Smith, Randolph M. Siverson and James D. Morrow,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Cambridge, M.A.: MIT Press, 2003); Bueno de Mesquita and Alastair Smith, *The Dictator's Handbook: Why Bad Behavior is almost Always Goo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11).

## (2) 대외원조와 지대국가론

외부의 원조와 자원수출과 같은 외래지대도 독재정권의 유지와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외부로부터의 원조 또는 석유나 여타 지하자원 수출 가능성이 있으면 독재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독재자의 입장에서 핵심 지지자를 매수하고 반대파를 억압하는 통치기구를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자금이 들어간다. 이를 내부 경제를 통해 동원하자면, 독재자는 내부 경제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독재의 기반이 되는 여러 조치를 해체하고 반대파의 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산권 보장, 계약준수, 독점의 해체와 자유 경쟁의 허용, 생산성 증가와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보 유통의 자유 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외부로부터 상당한 원조가 들어오고 또는 석유와 같은 일차 상품 수출을 통해 외환을 벌어들일 수 있다면, 독재정권은 내부 경제 생산성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정권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 (3) 독재정권과 경제성장

이는 민주주의와 독재가 해당 국가의 경제 발전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민주주의와 독재에 속하는 여러 국가의 역사적 경험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처리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북한의 미래와 관련하여 개발 독재론이 제안되는 것을 감안하면 후발산업화와 독재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가 북한정치(경제)연구에 가지는 의미를 간략하게 짚어 보자. 독재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모델은 북한의 개인독재 지배를 지탱하고 있는 물질 기반과 통치연합의 성격에 대해 보다 잘 밝힐 수 있는 이론과 개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김정일-김정은 정권이 정권기관에 대한 무역 특혜 배분을 중심으로 정권 유지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등 특권의 차별적 배분을 통해 지지자와 기타 주민을 불평등 대우하고 있는 것을 잘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원조 및 광물 자원 수출은 1990년대 이래 북한정권이 내부 생산성 증대를 위한 이렇다 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 존속해 온 것, 또한 원조 수혜와 광물 수출에 기반 하여 권력 체계 및 정권 기관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 등에 대해 밝혀줄 수 있다. 셋째, 독재 정권과 경제성장에 대한 논의는 북한 정치의 성격과 그동안 경제성장 실적의 상

관관계에 대해 밝혀줄 수 있으며, 아울러 북한의 미래로 제시되곤 하는 ‘박정희식 모델’ 또는 ‘중국식 모델’의 적실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 다. 혁명이론과 독재정권

2000년대 이후 독재정권 연구에서는 독재정권의 급작스러운 변동 가능성에 대한 사고는 취약하게 전개되었다. 독재연구가 제3의 민주화 물결 속에서 새로이 등장한 권위주의 정권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사회주의 정권의 급작스런 붕괴를 설명하고자 했던 이론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향도 나타났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체제전환, 그리고 중동의 재스민 혁명은 근대화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그리고 개별국가의 혁명에 있어서 국제적 요인 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이전의 혁명이론은 근대화라는 구조적 변동과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화된 체제인 사회주의권의 해체와 재스민혁명과 같은 지구화 및 정보화의 영향이 반영된 사례의 분석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북한은 지구적 차원의 독재정권 변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장기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체제 형태로 근대화된 국가이며 세계체제 변화라는 상황에 직면한 몇 안 되는 국가라는 점에서 정치변동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사회주의권 붕괴는 혁명론의 전개에 있어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한다. 봉건사회의 해체과정과 근대·산업사회의 등장이라는 과정, 이로 인한 다양한 변화를 혁명 상황으로 전제하는 기존 혁명이론이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례의 등장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는 자본주의적 방식에 대항하여 사회주의적 근대화·산업화를 추구했으며, 계급구조 및 혁명 상황에 있어서도 상이한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체제 근대화는 자본주의와 상이한 계급구조, 가치체계, 그리고 모순을 잉태하며 체제붕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더불어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는 자체의 모순과 아울러 국제정치적 맥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소경쟁의 한계에 직면하여 페레스트로이카를 선택한 고르바초프의 경우나, 소련이라는 강력한 후원자를 잃은 동독의 허무한 몰락 모두 혁명에 대한 국제정치적 맥락의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동유럽 역시 유사한 해석에



서 자유롭지 않다.

흥미로운 사실중의 하나는 견고하고 장기간 지속된 사회주의 독재체제가 사소한 계기를 통해 단기간에 붕괴되었다는 점이다. 루마니아 사례 등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할 경우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대부분 비교적 평화로운 과정을 경유했다. 대규모의 유혈충돌이나 급진적인 계급구조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았으며,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오지도 않았다. 변화는 마치 예견된 것처럼 보였으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러시아의 경우처럼 시민들의 반발은 사회주의체제 해체라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자신들의 복지와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발생했으며, 이는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였다.

중동 재스민 혁명의 경우 혁명 상황 조성 및 촉발요인, 그리고 진행경과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재스민 혁명은 세계화 및 정보화 사회라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적 정책결정 집행 주체인 정부(government)의 쇠퇴와 아울러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다. 거버넌스 개념의 탄생과 확산은 오늘날 이슈의 다변화 및 행위자의 다양성 증대에 따라 국가의 통치능력이 약화되면서 국가의 고유영역으로 간주되어온 정책결정과정에서 국가가 더 이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과 관련이 있다. 대의민주주의제도를 통해 국가에 일정 권리를 위임해온 국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조정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국가의 문제를 직시하고, 열린 정부를 요구하는 한편 정책결정과정의 참여를 통해 스스로의 권익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통치능력약화와 국민통치능력의 강화라는 상반되는 상황은 거버넌스 개념 탄생의 구조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정보화·지방화경향에 따라 국민국가의 권위와 역할 축소로 국가중심의 위계적 통치방식이 약화되고, 국가·시장·시민 사회관계가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국가권력의 배타적 영역의 축소를 의미하며, 따라서 정치적 권위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능성을 높여주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혁명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재스민 혁명의 경우 억압적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개입이 핵심적 계기로 작용했으며, 정보화 사회라는 기술적 진보도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했다. 개별국가의 혁명적 상황의 구성에 있어서 과거 국민국가의 개념에 대한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억압적 독재국가에 대한 국제적 영향력 및 개입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발달 등을 통해 국제적 가치의 공유 및 확산체계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정치변동의 고전이론이라 할 수 있는 골드스톤(Jack A. Goldstone)이나 스카치폴(Theoda Skocpol)의 분류는 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1980년 말 이후의 변화와 중동의 재스민 혁명과 같은 새로운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1980년대 이전까지의 혁명에 대한 해석은 주로 근대화와 산업화라는 시대사적 전환을 축으로 정치변동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비자본주의 방식으로 근대화를 진행한 사회주의체제가 진영차원에서 붕괴된 것과 유사한 사례는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분석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12년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붕괴와 재스민 혁명이라는 새로운 사례의 등장 시점에 존속하고 있으나,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 3. 정책제언

#### 가. 북한 정권 분석에의 유용성

독재정권 유형은 기본적으로 군사독재, 일당독재, 개인독재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순수한 기본 유형보다 여러 가지 독재정권의 특성들이 결합된 혼합형이 다수를 차지한다. 혼합형(hybrid dictatorship)은 개인독재, 군사독재, 일당독재가 뒤섞인 정권 유형이다. 가장 흔한 혼합형은 개인독재와 일당독재, 개인독재와 군사독재가 혼합된 유형이며 일당독재와 군사독재가 혼합된 경우도 존재한다.

북한 정권도 순수한 개인독재나 일당독재라기보다 개인독재와 일당독재가 결합된 혼합형으로 볼 수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에 대한 이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개인독재적 특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독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기본적으로 당이 영도하는 사회이다. 국가기관들도 당의 영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 정권은 조선로동당에 의한 일당독재적 특성도 지니고 있다. 여기에다 3대에 걸친 세습이나 김일성 가계의 구성원들이 득세하는 데서 확인되듯 군주제적 특성도 보인다.

이를 감안하여 독재정권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북한정치연구에 시사하

는 점은 첫째, 북한 정치사를 정권의 특성 또는 유형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정리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1948년 출범할 당시 북한 정권은 일당독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김일성은 수상이었으나 당 내의 여러 지도자들 가운데 한 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초중반 한국전쟁과 소위 8월 종파사건을 거치면서 김일성에게 대적할 만한 남로당계, 연안파, 소련파가 모두 숙청된 이후 1950년대 말 대중동원을 통한 경제건설이 본격화되고 특히 1960년대 후반 소위 갑산파의 숙청과 유일사상체계 확립이 주장되면서 일당독재정권은 개인독재정권으로 변화하였다. 이 시기 북한 정권의 성격은 일당독재와 개인독재가 결합된 혼합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 정권은 김일성 시기에 비해 당의 기능과 역할이 위축되고 대신 개인독재적 특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개인독재정권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나 정치국 회의가 거의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대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측근정치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였다.<sup>13)</sup> 한편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시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김정일 위원장 시대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명의의 결정을 중요한 인사 등을 단행하고 있다. 이것이 당의 집체적 의사결정 기능이 복원되었음을 의미하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에 비해 개인적인 권위나 정당성이 취약한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틀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 시기의 이러한 변화가 개인독재적 특성의 약화와 일당독재적 특성의 강화로 이어질지 가능성이 주목된다.

둘째, 북한 정권은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정권유형별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군사독재정권보다는 개인독재정권이, 개인독재정권보다는 일당독재정권이 장수하는 경향을 보였다. 1946년부터 1998년까지 존재했던 군사정권은 평균 9년 지속되었고 개인정권은 15년, 일당정권은 23년간 지속되었다. 1998년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군사정권의 평균나이는 7년, 개인정권은 거의 19년, 일당정권은 35년이다.<sup>14)</sup> 정권의 유형별 특성이라는 점에서 북한 정권이

13)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07), pp. 219~260.

14) Barbara Geddes, "What Do We Know about Democratization after Twenty Year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2 (June, 1999), pp. 131~132.

단명하기보다 장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히 개인독재정권이나 일당독재정권을 붕괴시킬 만한 사회적 저항이나 외부의 충격이 가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사회경제적 양극화나 지역적 분화 등 균열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아직 잠재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북한 정치에도 분파적 갈등구조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권위주의 정권에서의 정치는 분파주의(factionalism), 경쟁, 투쟁을 포함한다. 다만 경쟁적 분파간의 경쟁은 권위주의 정권의 종류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하며 서로 다른 결과를 야기한다.<sup>15)</sup> 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 다만 분파적 갈등구조의 존재 자체가 정권의 안정성을 심각히 저해하거나 정권의 붕괴를 촉진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일당독재정권에서 분파의 존재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안전밸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되어야 한다.

#### 나.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단계 예측에의 유용성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던 ‘제3의 민주화 파도,’ 1989년 이래 전개되었던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북한과 같은 국가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정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북한과 같은 경우에 만약 현 체제가 동요하고 재편되는 경우에 상정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권위주의와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정치권력과 시장교환을 혼합하는 정치자본주의<sup>16)</sup>의 발전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체제의 앞으로의 변화와 관련하여 먼저 지적해야 하는 것은 북한의 정치체제는 이미 변화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1980년대 말까지의 북한 정치체제와, 그 후로부터 20년이 지난 2010년대 초 북한의 정치체제는 서로 구별되는 상이한 개념을 사용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린쯔와 스테판(Alfred Stepan)의 정치체제 유형론을 응용해본다면, 1980년대 말까지 북한의 정치체제는 ‘극도의 개인독재와 결합한 전체주의(totalitarianism cum sultanism)’이라고 할 수 있고, 2010년대의 북한 정치체제는 ‘탈 전체주의와 극도의 개인독재 하에서의

15) *Ibid.*, p. 121.

16) 이 개념에 관하여 박형중,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 『통일 정책연구』, 제20권 1호 (통일연구원, 2011), pp. 216~219.

폭정(post-totalitarian sultanistic tyranny)'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7)</sup> 1980년대 말까지는 당기구와 명령경제 체제를 중심으로 '개인에 대한 항시적인 총체적 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로 개인에 대한 전체주의적 통제가 불가능해졌지만 사회 내에는 전체주의적 유산이 여전히 강력히 남아있다는 의미에서 탈 전체주의적이다. 한편 북한의 개인독재는 1980년대 전체주의적 구조와 상호 결합되어 있었으나, 1990년대 이래 탈 전체주의적 상황에 적응해가면서 변화하고 있다. 나아가 1980년대 말까지의 전체주의에서는 억압과 충성이 상호 강도 높게 결합되어 있었지만, 1990년대 이래로 충성의 측면은 약화되고 억압의 측면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1990년대 이래 북한 정치체제를 폭정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독재정권 연구에서의 경험적 결론 중의 하나는 독재정권은 붕괴하면 대체로 다른 형태의 독재정권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독재의 붕괴가 민주주의의 성립과 등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제는 현존하는 북한의 정치체제가 붕괴하는 경우에 그 다음 체제의 성격과 관련하여 우리의 합리적 기대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시사점을 던져준다. 만약 앞으로 북한에서 어떤 정치변동이 발생한다면, 그 정치체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폐쇄된 권위주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의 북한 보다는 개선된 상태이겠지만, 폐쇄된 권위주의에서는 여전히 정치적 경쟁이 불허되고 야당세력이 합법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봉쇄되어 있다. 이 폐쇄된 권위주의에서 위기가 발생한다면 북한의 정치체제는 경쟁적 권위주의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경쟁적 권위주의에서는 민주주의 제도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며 실질적으로도 얼마간 기능한다. 그렇지만 부정한 수단, 시민 자유 침해, 국가의 미디어 자원에 대한 오용 등이 정치적 행위조건을 왜곡한다. 이 두 종류의 정치체제는 대체로 상당 기간 존속할 가능성이 높다.

동유럽과 구소련 국가에서 공산주의 체제 붕괴 이후에 성립하는 정치 및 경제 체제의 경험을 보아도 이러한 예측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공산주의 국가들 중에서 서방에 가까운 쪽일수록 공산주의 붕괴이후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신속히 성립하고 기능했다. 먼 쪽일수록 권위주의와 왜곡된 시장경제를 초래했다. 이러한 경험에서 보면, 공산주의를 경험한 어느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17) 박형중, “북한에서 1990년대 정치체제 변화: 전체주의 겸 술탄주의로부터 탈전체주의적 술탄주의 폭정으로,” 『정책연구』, 통권 168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1 봄호), pp. 102~130.

성립하고 기능할 가능성은 그 국가에서 공산주의 성립 이전에 현대화의 수준이 어떠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공산주의 성립 이전에 이미 의회민주주의, 발전된 시장경제, 법치와 현대적 관료제를 경험했던 나라의 경우에는 공산주의 붕괴와 동시에 대체로 제대로 기능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성립이 가능했다. 이러한 나라로 대표적인 것은 동독, 체코, 발틱공화국들이다. 반 존(Hans Van Zon)의 언급을 빌리면 이렇다.

부패, 정부 효과성,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와 관련한 지표는 중동부 유럽에서 두 지역에서 선명한 차이가 난다. 이러한 두 지역 간 차이는 경제 실적 지표 차이와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공산주의 통치의 존속 기간 그리고 거버넌스 및 경제 실적 지표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마찬가지로 사회주의가 성립하기 전에 자본주의 발전과 의회민주주의를 경험했는가의 여부와 위에서 언급한 지표의 국가별 순위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은 역사, 특히 사회주의 이전의 역사가 현재의 경제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 요소라는 것을 시사하며, 또한 중동부 유럽에 특이한 문화적-행위적 지역이 대두한 이유를 설명한다.<sup>18)</sup>

중동부 유럽의 구 공산주의 국가와 비교할 때, 의회민주주의, 발전된 시장경제, 법치와 현대적 관료제와 관련한 북한의 역사적 경험은 거의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현 체제 붕괴 이후에 성립하는 체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어떤 체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체제의 정치와 경제가 어떤 내용을 갖는가는 반 존이 묘사하고 있는 푸틴 하의 러시아 체제를 보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인물화 되고 가산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가 경제 내부에 인물화 되고 가산제적 규칙을 창출한다. 정부 지도자들은 규칙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는 데, 그 이유는 규칙이 제도화되면 정치권력이 제한 당하며 재부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의 이점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가산제적 국가에서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사법부는 국가 관료체의 일부로 사실상 간주되며 크렘린(또는 지역과 지방의 우두머리)에 종속되어 있다. 국가는 법적 제한에 구속되지 않는다. 러시아에서 관료체의 비중은 매우 압도적이어서, 후견-피후견 관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 모든 단위에서 갈등

18) Hans Van Zon, “The Cult of Power: Russia’s Development Problem,” Paper Presented at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EACES) 9th Bi-Annual Conference: Development Strategies – A Comparative View, p. 1; Han Van Zon, *Russia’s Development Problem: The Cult of Power* (London: Palgrave, 2008).

관리에 투명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스의 권력은 제한되지 못한다. 사회적 관계, 제도간의 관계를 통치하는 규칙이 부족하고, 사회에는 일반적으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협동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기업과 조직들 사이에 협동적 태도가 부족하고, 국가는 비-국가조직에 대해 방해자적 역할을 한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지방적이고 폐쇄적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내부자 끼리 신뢰와 협조를 도모하지만, 외부자는 배제하여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부여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 이러한 국가는 지대추구를 촉진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 내지 못하며 또한 기능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자본 시장을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치되지 않는 시장은 경제생활에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따라서 (경제행위에서) 단기 관점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낸다. 부자가 되고자 하면 생산적 분야와 혁신에 투자하는 대신 부패한 관료 및 정치가와 좋은 관계를 맺어 놓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이들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다.<sup>19)</sup>

## 다. 정치체제와 경제실적 상관관계 분석에의 유용성

정치경제학적 모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목할 수 있다. 첫째, ‘승자연합’의 협소성이다. 둘째, 경제모델과 관련하여 제시된 여러 개념들을 조합하면 ‘탈 전체주의적 폭정’이라는 개념이 1990년대 이래로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를 서술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셋째, 북한이 1990년대 이래로 외부로부터의 막대한 원조,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광물자원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대국가로 설정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지대국가로서의 성격은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첫째와 둘째 문제를 다룬다.

먼저 승자연합의 협소성이 북한 내의 정치·경제, 즉 자원배분과 경제실적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북한에서 승자연합이 협소하다는 것은 북한은 극단의 개인독재 유형이었을 뿐 아니라 그 권력이 두 번에 걸쳐 세습되었다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 독재정권 유형론에서 보았듯이 개인독재는 일당독재에 비하여 지지기반이 현저히 협소하다. 일당독재의 경우에는 일당 안에 사실상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파벌이 존재하고 전반적 자원배분과 경제정책이 그리고 중요한 직책에 대한 임명이 파벌 간의 타협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개인독재의 경우는 승자연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또한 이들 승자연합 구성원에게 충분한 물적 보상을 통해 그 단결성을 견고히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두 번에 걸쳐 권력을 세습함으로써 엘리트 주류 파벌의 구성에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독재자가 잠재적

19) Van Zon, “The Cult of Power: Russia’s Development Problem,” pp. 9~12.

반대파와 흥정하고 타협하는 기능을 하는 명목상의 민주제도가 거의 기능하지 않는다. 북한에서는 무엇보다도 조선노동당의 정치국, 당중앙위원회 같은 회의체가 1980년대 이래 거의 기능하지 않았음을 지적할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승자연합이 매우 협소하게 소규모로 구성되는 경우, 경제실적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정치경제학적 모델의 논리에 따르자면, 북한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승자연합이 협소하고 정권에 대한 사회의 도전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재자는 거리낌 없이 경제에 간섭하여 충성집단에 유리한 재분배 구조를 만들고 동시에 독재자의 사치적 소비를 위한 자원을 극대화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는 여기에다가 군비증강과 유지와 같은 대규모 소비성 지출을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경제적 잉여의 대부분이 생산적으로 재투자되지 않고 정권 충성자 포상, 독재자의 개인소비 그리고 비생산 소비로 사용됨으로써, 경제가 영구 침체에 빠지게 되는 구조적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체제의 경우에는 경제의 생산성이 장기정체하거나 오히려 저하하는 가운데서도, 독재자 개인소비, 충성자 포상, 그리고 북한의 경우 무엇보다도 과도한 군비 유지를 위한 자금이 지속적으로 조달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정권의 대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주민에 대한 정권의 약탈적 행위의 증가이다. 실제로 약탈 국가론에서 제기되는 약탈 국가의 여러 특징을 북한 정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내부 경제의 생산성을 증가시키지 않고서도, 가용 자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대외원조에의 의존과 광물과 같은 1차 상품 수출에 매진하는 것으로 경제구조가 점진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에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지대 국가적 변형 과정은 내부 경제의 생산성이 극도로 저하된 1990년대에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할 수 있다.

나아가 독재에 대한 경제모델, 특히 윈트로브가 제공하는 개념을 적용해보면, 북한의 정치경제는 1980년대까지의 전체주의에서 1990년대 이래 폭정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주의는 충성과 억압이 공히 높은 체제이고, 폭정은 충성은 없고 억압이 주로 행사되는 체제이다. 1980년대 말까지 북한의 정치경제에는 충성과 억압을 보장하는 여러 장치가 기능했다. 예를 들어 계획경제와 배급제 그리고 이데올로기와 당 조직이 기능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 언급된 네 가지 모두 현저히 약체화되거나 붕괴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정권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방향에서 대응했고, 이는 윈트로브가 말하는 폭정 개념에 부합한다.<sup>20)</sup> 첫째, 1990년대 이래 ‘가산제적 자본주의’의 발전이다. 1980년대까지 북한정권은 극도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와 배급제를 통해, 정권유지 기여집단과 계층에 차별적으로 특혜적 자원 배분을 했다. 1990년대 이래 계획경제와 배급제가 붕괴함에 따라, 북한정권은 권력유지 필요도에 따라 시장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업 허가권을 중심으로 경제적 이권과 독점을 차별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이러한 배분에서 가장 중요한 특권을 누리는 것이 김정일의 사금고라고 할 수 있는 당경제이다. 그 다음으로 군과 당의 권력기관이 특권을 배분받고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북한정권은 계획에 비해 시장이 현저하게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통제 바깥에서 세력이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 활동의 확산을 막아왔다. 이와 같은 성격의 여러 정책 중에서 2009년 11월 30일에 시행된 화폐 개혁은 정권의 사회에 대한, 특히 중소상인을 포함한 일반주민의 개인자산에 대한 약탈적인 정책을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셋째, 북한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국가실패와 부자유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의 하나이면서도 주민을 강력한 억압을 통해 지배할 수 있는 나라로 간주된다.

## 라. 지대의 성격과 사용의 분석에서 유용성

지대국가론은 북한 분석에 적용해보고자 할 때, 제기되는 핵심 질문은 두 가지이다. 첫째, 북한을 지대국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북한에서 생성되는 지대는 어떠한 성격을 갖는가이다.

북한의 경우 물론 중등 산유국과 같은 풍부한 천연자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광물자원을 비롯한 부존 경제자원에 대한 독점, 그리고 정치적 자원에 대한 독점을 통해서 적어도 국내적으로는 이들 정치적, 경제적 자원들이 ‘정상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윤을 넘어서는 경제지대, 정치지대를 생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대가 정치적 지배연합 내에서 배분됨으로써 전형적인 지대국가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는 부존하는 정치, 경제적 자원이 지배집단의 지대 추구 행위를 통해서 체제유지의 목적에 전용됨으로써, 국가경제와 인민들에게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지배엘리트들의 권력과 부의 유지에 소비되는 것이다.

20) 박형중, “북한에서 1990년대 정치체제 변화: 전체주의 검 술탄주의로부터 탈전체주의적 술 탄주의 폭정으로,” p. 124.

북한의 경제지대에서 주를 이루는 것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광물자원으로부터 자원지대이다. 석탄,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연 및 아연, 석회석 등의 광물자원은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을 구성하고 있다. 남북교역을 제외한 2008년도 대외무역 총액 중 광물 및 광물제품이 수출 총액의 60%를 차지하면서 북한 최대의 외화 획득원으로 역할하고 있고, 북한의 광업은 2010년 현재 당해 년 가격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4%를 넘어서고 있다.

북한의 정치지대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은 통치자금과 불법 거래이다.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정상적인 무역을 통한 외화수입으로는 심각한 에너지난이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없으며, 특히 정권의 유지를 위한 ‘통치자금’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외화 수입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북한은 일련의 합법 또는 불법적인 거래(illicit transactions)를 통해서 추가적인 외화를 획득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북한의 정치지대의 주공급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외에서 조성된 외화 수익은 제3국에서 신용장이나 송금결제 등을 통해 오스트리아 등지에 있는 금별은행 등에 입금되어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회 700~800만 달러 정도 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대략 20억~43억 달러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마. 경제개혁과 반개혁의 악순환에 대한 설명에서 유용성

이상에서 전개한 논리는 북한이 왜 개혁과 반개혁의 악순환에 빠져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 관련하여 제기되는 핵심 질문은 네 가지이다. 첫째, 왜 북한은 중국과 같은 광범한 시장개혁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가, 둘째, 왜 북한의 제한적 개혁은 지속적이지 못하고 ‘도입과 정체(stop-go)’의 양상을 반복하고 있는가, 셋째, 북한 지배연합의 개혁저항은 어떠한 양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넷째, 북한의 자발생적인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북한에서의 경제개혁은 지배연합의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의 유지’와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사이에서 뒷에 걸려 있다. 북한에서의 개혁저항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배연합 내부에서 생성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개혁을 시도함으로써 전형적인 ‘개혁도입-정체’가 반복되는 양상(stop-go pattern)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지배연합에 의한 지대의 독점적 전유와 배분은 가산연합의 내부에만 국

한되고, 북한 주민들은 피폐한 경제의 고통을 겪으면서 스스로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국가의 배분능력이 고갈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외세가 아닌 ‘국가로부터의 자력갱생’ 노력의 결과가 바로 국가와 사회의 단절이며, 전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시장화인 것이다. 북한 지배연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조건은 척박하며, 생존과 생계를 위한 북한 주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자생적 시장화’를 무조건적으로 탄압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시장은 고갈된 체제를 그나마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윤희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지배연합은 다른 한편 체제의 속성과 본질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시장의 만연과 활성화를 좌시할 수만도 없는 딜레마에 처해있기 때문에, 독점적 가산연합은 이에 대한 마지못한 ‘추인 또는 수용’과 ‘반개혁적 통제’ 사이를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

## 바. 북한 정치변동의 이해에서 유용성

1980년대까지의 주요한 혁명이론은 근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농업사회의 해체와 산업사회의 도래라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귀족과 지주, 농민계급이라는 봉건사회의 계급구조가 자본가와 노동자로 전환하는 산업화 과정을 기반으로 하며, 전환과정의 양태에 따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파시즘의 형성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진행된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혁명이론에 새로운 해석을 요구했다. 사회주의 방식으로 근대화된 사회주의권이 진영차원에서 붕괴되었으며, 이후 대부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서구적 방식의 경로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체제전환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들의 최종적인 지향점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그 과정이 아직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 국가의 정치변동에 대한 평가는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사회주의체제 붕괴에 대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반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론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중동의 재스민 혁명 역시 기존 혁명이론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새로운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 진행된 정치변동의 경우 이슬람 종교국가라는 공통점 이외에 SNS의 영향이라는 정보화 사회의 특성과 세계화의 조류를 반영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중요한 영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라는 특성이외에 세계화 및 정보화 사회에서도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으며, 이는 기존 혁명이론의 분석틀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에 해당한다. 반면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와 체제전환, 그리고 최근 중동의 재스민 혁명을 포함하여 지구촌의 장기독재체제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독재체제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되고 있다.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는 북한체제유지를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존속이 독재체제의 영속성을 입증하는 유일한 논거가 될 수는 없다. 기존의 혁명이론은 다양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독재체제의 정치변동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한 함의들을 제시하고 있다.

계급갈등과 정치변동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의 경우 북한이 경제위기속에서 새로운 계급분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북한의 경제위기에 따라 기존 배급체제의 혼란 및 부분적, 음성적 시장화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주의 계급구조의 변화 및 정경유착형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 대한 감시, 감독권을 가진 권력기관 및 관계자들의 경우 단속권을 적극 활용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형태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 시장참여자들의 경우 권력과의 결탁이 없이는 상행위가 어려우며, 소위 ‘큰 손’들의 경우 당국의 비호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권력과 시장의 결탁은 새로운 배타적 부유층을 형성하며 북한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추세를 가속화시키게 된다. 정경유착형 음성적 시장화의 진전은 독과점체제로 귀결되며, 이는 대다수 북한 주민들의 세외부담 증가와 국가 및 중간 관리층의 수탈구조를 심화시키게 된다. 결국 시장에서 상행위의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일반 대중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정경유착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대다수 주민들은 시장에서의 퇴출과 아울러 생계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반면 상층부 상인들은 권력의 비호아래 독과점지위를 공고히 함으로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강화된다.

정경유착형 부익부 빈익빈 구조는 주민들에 대한 수탈의 증가와 아울러 관료들의 사적이익 추구수단이라는 점에서 국가재정증대에 기여하지 못한다. 아울러 부정부패구조의 심화를 동반함으로써 국가 운영 체제의 와해를 가속화시키게 된다. 보다 주목할 부분은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사회주의 계급구조의 와해와 아울러 북한 사회의 갈등을 확대,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평등체제의 약화와 아울러 새로운 계급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간부 대 비간부’

간의 적대적 관계를 구조화 한다는 점에서 북한 정치변동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집합심리학적 관점 역시 북한 정치변동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논의라 할 수 있다. 화폐개혁의 실패 이후 북한 상황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 개념의 적용이 가능하다. 공급확대 방안이 결여된 화폐개혁은 경제체질개선 보다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지배구조 확립 및 시장자본에 대한 일방적 수탈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화폐개혁은 처음부터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는 것이며, 화폐개혁을 주도한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의 신속한 숙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증명하고 있다. 배급체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시장은 북한주민들에게 생존을 위한 유일한 출구였다. 화폐개혁을 통한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전격적이고도 강제적인 개입은 북한주민들에게 좌절과 아울러 체제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 혁명은 절대적 빈곤이나 위기의 상황보다는 기대가 좌절되는 국면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집합심리학적 관점에 입각할 경우 화폐개혁실패 이후 북한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식경제체제의 붕괴상황에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강제적 개입은 집단적인 심리적 좌절감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향후 북한 사회변화 및 정치변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불만은 과거와 달리 체제와 지도자에 대한 직접적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sup>21)</sup>

북한 당국이 2012년을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제시해온 점도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장기간의 경제난과 궁핍에 시달린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당국은 그동안 정치적 상징성이 큰 2012년을 암묵적인 ‘희망의 해’로 제시, 인내와 노력을 강요해왔다. 이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제시라는 긍정적 기능과 아울러 희망이 좌절되었을 때 폭발적 저항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은 국내정치행사를 위해 배급체제의 정상화 및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회복 등 가시적 성과를 주민들에게 제시해야 하나 이를 위한 자원의 확보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북한 당국이 약속했던 2012년에도 개선된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인내를 강요당했던 북한의 민심은 집합적 좌절로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22)</sup>

북한 정치변동을 촉발할 수 있는 자원이 양적, 질적인 차원에서 증가하고 있다

21) 조한범, 2012년 북한 위기 가능성, KINU Online Series Co 12-03, p. 3.

22) 위의 글, p. 4.

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언급한 경제위기 과정에서 새로운 계급분화와 계급갈등의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과거와 다른 요인들의 나타나고 있다. 김정일이라는 강력한 권력자가 사망하고, 정치적 카리스마와 지지기반이 미약한 김정은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을 승계했다. 이는 지배체제내의 분화가능성과 아울러 체제위기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직 체계적인 체제저항 행위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과거와 달리 반정부 성향의 낙서, 뼈라 등 체제저항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안관리 및 간부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탈북자를 중심으로 북한주민에 대한 외부정보 확산 및 북한민주화를 위한 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되는 점이다. 2011년 말 100만대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내 휴대전화 보급률도 중동 재스민 혁명에서 입증된 SNS 효과의 잠재적 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 및 최근 독재국가의 다양한 정치변동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 근본적인 정치변동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이 ‘북한 불변론’의 유일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북한의 독재체제 역시 기존 혁명이론이 다루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잉태하고 있으며, 정치변동을 촉발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상황의 전개양상 및 북한 지배체제의 대응능력 보유여부는 향후 북한 정치변동 발생 및 전개양상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4. 기대효과

본 연구는 북한정치연구가 연구의 지평을 현저하게 넓히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정치연구를 포함하여 북한연구는 당면의 정세분석 위주로 하였다. 또한 북한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이론과는 상대적으로 유리되어 있었다. 따라서 북한연구는 전형적인 낮은 단계의 지역학, 한국 및 일반 사회과학계 내의 외톨이 학문에 머무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를 극복하는 초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북한정치연구에서도 분석과 정책의 사고와 입안에서 다른 학문 분야와 또한 국제적으로도 의사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한다.

독재의 유형 분류는 유형에 따라 정치적 동태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또한 북한과 유사한 개인독재정권의 정치변동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북한정치체제가 변화하게 될 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해줄 수 있다.

독재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모델은 북한의 개인독재 지배를 지탱하고 있는 물질 기반과 통치연합의 성격에 대해 보다 잘 밝힐 수 있는 이론과 개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김정일-김정은 정권이 정권기관에 대한 무역 특혜 배분을 중심으로 정권 유지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등 특권의 차별적 배분을 통해 지지자와 기타 주민을 불평등 대우하고 있는 것을 잘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원조 및 광물 자원 수출은 1990년대 이래 북한정권이 내부 생산성 증대를 위한 이렇다 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 존속해 온 것, 또한 원조 수혜와 광물 수출에 기반하여 권력 체계 및 정권 기관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 등에 대해 밝혀줄 수 있다. 셋째, 독재정권과 경제성장에 대한 논의는 북한 정치의 성격과 그동안 경제성장 실적의 상관관계에 대해 밝혀줄 수 있으며, 아울러 북한의 미래로 제시되곤 하는 ‘박정희식 모델’ 또는 ‘중국식 모델’의 적실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 참고자료

### 1. 단행본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07.

Bueno de Mesquita, Bruce and Alastair Smith. *The Dictator's Handbook: Why Bad Behavior is Almost Always Goo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11.

Bueno de Mesquita, Bruce, Alastair Smith, Randolph M. Siverson and James D. Morrow.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Cambridge, M.A.: MIT Press, 2003.

Chehabi, H. E. and Juan J. Linz (eds.). *Sultanistic Regim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8.

Gandhi, Jeniffer and Adam Przeworski. *Political Institutions Under Dictatorship*.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Linz, Juan J. "An Authoritarian Regime: Spain." E. Allardt and S. Rokkan (eds.). *Mass Politics* (first published 1964). New York: Free Press, 1970.

Von Zon, Hans. *Russia's Development Problem: The Cult of Power*. London: Palgrave, 2008.

## 2. 논문

박형중.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통일연구원), 2011.

\_\_\_\_\_. “북한에서 1990년대 정치체제 변화: 전체주의 겸 스탈탄주의로부터 탈전체주의적 스탈탄주의 폭정으로.” 『정책연구』. 통권 168호 봄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1.

조한범. “2012년 북한 위기 가능성.” KINU Online Series, Co 12-03.

Barbara Geddes. “What Do We Know about Democratization after Twenty Year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2, June 1999.

Gandhi, Geniffer and Adam Przeworski. “Authoritarian Institutions and the Survival of Autocrat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40, No. 11, November 2007.

\_\_\_\_\_. “Cooperation, Cooptation and Rebellion Under Dictatorship.” *Economics and Politics*. Vol. 18, No. 1, 2006.

Greenstein, F. I. and N. W. Polsby (eds.).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Macropolitical Theory: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3. Reading, M.A.: Addison-Wesley, 1975.

Magaloni, Beatriz. “Comparative Autocracy.” Paper for delivery at the conference “Research Frontiers in Comparative Politics.” Duke University, April 27, 2007.

Von Zon, Hans. “The Cult of Power: Russia’s Development Problem.” Paper Presented at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EACES) 9th Bi-Annual Conference: Development Strategies, A Comparative View.